

종합·해설

대선 후유증 추스리고 당내 혁신 숙제

■ 민주 박기춘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의미와 과제

전대시기 놓고 주류·비주류 갈등 우려

안철수와 관계 정립·4월 재보선 주목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이 대선 패배 후 방향을 잊은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에 올라 지도력을 시험받게 됐다.

애초 이번 신임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겸임하는 자리였으나, 그가 “원내대표만 맡겠다”며 비대위원장 별도 선출 방침을 밝힘에 따라 새로 뽑힐 비대위원장과 함께 좌초 위기에 빠진 ‘민주호’를 이끌어가게 됐다.

4개월여간의 시한부 자리이긴 하지만 그가 ‘박근혜 정부’ 초기의 여권에 맞서 제1야당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무형’인 그의 당선에는 대선 패배 후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됐던 친노 책임론의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결선에서 박 신임 원내대표(63표)와 친노·주류의 지원을 받은 신계륜 의원(58표)의 표차는 5표에 그쳐 당장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계파간 주도권 다툼이 팽팽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

또 당장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친노·주류와 비주류간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도 근심거리다.

현재 친노·주류와 비주류 간 ‘5월 전대론’과 ‘3월 전대론’이 충돌하면서 물밀 신경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조만간 구성될 비대위 성격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와도 연결된다.

나아가 박 원내대표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최측근 의원으로 꼽히고 있어 또 다른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주류 그룹은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새 지도부가 출범해야 한다며 ‘조기 전대’ 카드를 꺼내들 테세다. 전대 자체를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으로 처리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포석도 있어 보인다. 비대위는 전대 룰 정비 등 공정한 전대 관리에 초점을 두는 ‘관리형 비대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친노·주류 진영이 전대를 최대한 늦춰 대선 패배 책임론을 회색, 당권 재창작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의구심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비주류 측 한 3선 의원은 지난 30일 “박근혜 정권 출범에 맞춰 민주당 지도부도 새 진용을 갖춰야 한다”며 “본격적인 개혁과 혁신도 새 지도부의 뒤이며, 4월 재보선도 새 지도부 책임하에 치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원내대표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최측근 의원으로 꼽히고 있어 또 다른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선출 절차를 조속히 매듭지은 뒤 당내 분열상을 치유하면서 비대위원장과 호흡을 맞춰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혁신과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편 가르기와 진영논리, 담합·불투명한 의사 결정 등을 뿐리 뽑고 파벌이나 계파로 갈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처절한 반성과 평가, 처절한 혁신을 통해 재창당 수준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빛속까지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론 등 당 밖의 범야권 세력과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의 관계 정립도 숙제로 남아 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선 후보에게 등을 돌린 중도층·무당파를 끌어안기 위해 당의 노선과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비대위원장과 함께 4월 재보선도 전면에서 치러야 하는 처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금융소득과세 기준 4000만원→2000만원

여야 세제개편안 합의

여야는 지난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합의된 기준금액 2500만원보다 500만원을 더 낮춘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사협의회를 놓고 협의하게 맞서왔다.

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내리면 3000억원 가량 세수 확충이 예상된다. 그동안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민생 공약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를 놓고 협의하게 맞서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올해부터 만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교육

내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 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지도자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4000억원(지방자치 단체 부담분 포함)을 전액 증액하기로 했다.

보육료의 경우, 선별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2세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양육수당의 경우,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자상위 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 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연령대로 확대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희망찬 새해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종합·해설



지난 30일 광주 무등산을 찾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증심사 입구에서 등산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문 전 후보는 이날 18대 대선 당시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자 30명과 함께 ‘노무현 길’ 행진에 나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역민 열정 허망하게 돋 송구…희망 만들어가야”

문재인 세밀 광주 방문 지역 원로들과 간담회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지난 30일 광주를 방문, “민주당이 더 큰 정당, 다른 지역에서도 지지받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후보는 이날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YMCA에서 연 광주시민사회단체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주시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열정을 다 보여줬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허망했지만 우리가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엔 문 전 후보를 비롯한 무진 스님·문병란 시인·이철우 목사·이홍길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임추섭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

표·장병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최양님 광주YWCA 회장 등 지역 원로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모두 밀언 뒤 장 위원장이 비공개전환을 제의하면서 공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간담회 앞서 지역 원로들은

이날 대선에서 패한 문 전 후보를 위로하면서도 그의 향후 역할에 대해선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새 정치 실현 광주전남연대 전홍준 대표는 “곧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문제가 생기면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주길 바란다”며 “광주는 지난 100년간 5·18 민중항쟁 등 20~30년 주기로 피를 봐 왔다. 다시는 이러한 징크스가 광주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도청 이전·해수부 유치 공론화”

김경재 수석부위원장 밝혀… 실현 가능성 논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산하 국립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된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이 최근 “해양수산부 전남 유치와 전남 도청 이전 방안 등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교통방송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나름대로 문서를 준

비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에 제출해 공론에 부치려고 한다”며 “해양수산부 부활이 부산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목표로 가져갔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부산에서 그 공약을 발표했는데 전남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는 질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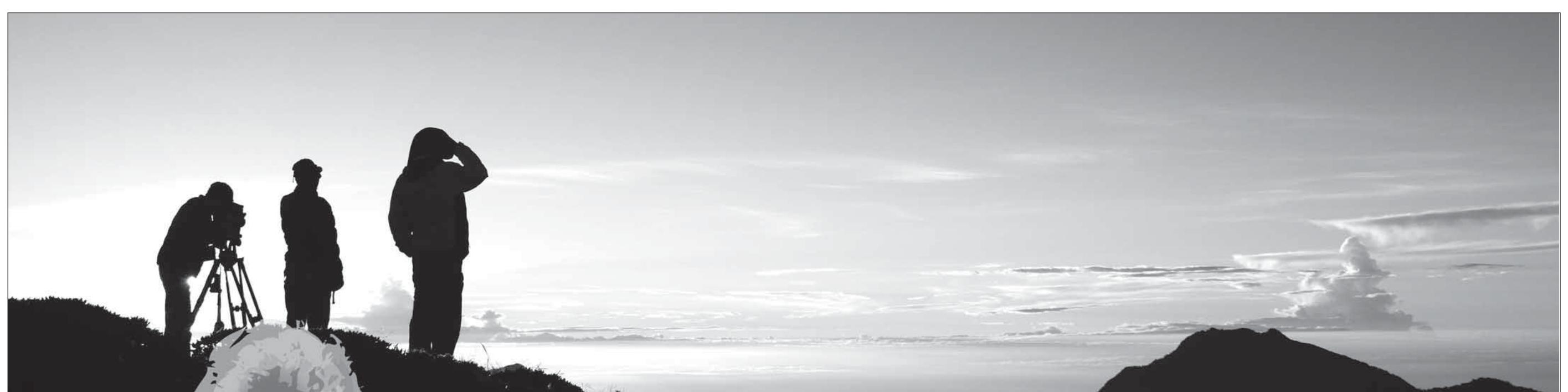
“호남 총리를 뽑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호남 민심

을 어루만지는 게 낫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 공약인 해수부가 부활하면 부산 대신 전남으로 옮기고 그 장소로 전남도청 등을 활용하고 도청은 다시 광주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전남도청 이전 새 후보지로 나주와 화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수부 전남 이전 발언은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 반발 등 새로운 갈등거리로 등장할 우려가 크다.

/이종행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한해동안 많은 사랑 감사드리며, 더욱 새로운 모습,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고객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제사년에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해도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브랜드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2-1번지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www.joy2000.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